

강원상품권 서민 피해 우려

도 30억→200억 발행 확대 계획... 각종 공사·행사 사용 권장
건설업계 “공사대금 지급하면 인부 임금으로 쓰일 것” 반발
지역자금 유출 막으려다 역효과 날 수도... 도 “철저히 관리”

도내 자본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상품권 발행이 서민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도는 2014년 기준 3조8,000억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중 도내 발주공사를 수주하는 외지건설사가 1조4,100억원(37%),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5,200억원(14%), 개인의 역외소비를 통한 순유출이 1조8,700억원(49%)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고착화된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내에서만 통용이 가능한 강원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역내 자금순환을

늘려 소비 촉진, 지역상권 보호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상품권도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세분화해 화폐의 형태를 갖췄다. 올해 30억원 발행에 이어 내년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화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도 역시 각종 공사와 행사, 용역 등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자금의 가장 큰 유출 통로인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외지 업체에게 강원상품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역시 하청업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는 건설인부들의 임금 대응으로 사

용될 것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강원상품권이 대학 등록금과 세금 등 공공금 납부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바쁜 인부들에게 사용이 제한적인 강원상품권 지급은 또 다른 ‘갑질’의 형태로 비칠 수도 있다.

오히려 건설노조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은 “외지 건설업체는 도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도의 상품권 지급 제한을 수용하겠지만 피해는 결국 힘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강원상품권은 도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외지 건설업체의 경우 도내 장비 사용과 인력 고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임금 지급은 못 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시청 신축공사 35개사 참여

【춘천】춘천시 청사 신축 공사에 35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춘천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예정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분야의 현장설명회에 35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했다.

사업비는 550억원이다. 관련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500억~1,000억원인 3군 업체만 대표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은 40% 이상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열리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도내에서는 춘천지역 3군 업체 2곳을 포함해 8곳이, 외지업체는 2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무현기자

학곡지구 개발 설명회 23개업체 몰려

【춘천】속보=6개월 만에 재추진되는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분보 지난 13일자 16면 보도)에 민간업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춘천시화물차공영차고지에서 열린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명회에는 시행사 및 투자자와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23개 업체 관계자와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7개 업체가 참여했던 지난해 10월 설명회의 3배가 넘는 관심도다.

참석자들은 2,600세대 정도로 예상되는 공공주택용지를 비롯해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원 등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마친 복합주거타운 조성안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유심히 살폈다. 이미 사전답사까지 마쳤다고 밝

민간업체 관심 폭발적... 지난해 7곳 비해 대폭 상승
공공주택·복합주거타운 등 투자가치 유심히 살펴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17일 춘천시화물차공영차고지에서 투자자와 시공·시행사 및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힌 일부 시행사에서는 높은 표고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와 춘천도시공사가 405억원을 투입해

확보한 32만6,000㎡의 부지 위에 500억원대의 개발비를 부담할 유력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방식은 사업자 공모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점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지난해와 같다. 토지이용계획을 민간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한 뒤에도 변경 승인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부분에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는 오는 7월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한 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도와 국토부에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SPC 구성 과정부터 도의 승인을 받으면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원주~강릉 신규역사 조성 본격화

624억 규모...이달 말 4곳 모두 시행사 결정

624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신규역사 건립공사가 발주, 이달 말 낙찰자가 결정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창·진부·횡성·둔내 등 원주~강릉 복선전철 신규역사 4건을 긴급 공고하고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4건 모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30%이상 적용시켜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창 용평면에 건립될 평창역사의 공사비는 193억원이며 진부역사는

161억원, 횡성읍에 들어설 횡성역사는 137억원, 둔내역사는 133억원으로 총 624억원 규모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건의 신규역사에 대해 모두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개찰은 오는 27일 한꺼번에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주 '평창-정선(3공구) 도로건설 전기공사' 등 5건에 169억원 공사 입찰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금액은 4382억원이다. 안은복 rio@kado.net

'춘천시 청사 신축' 35개 건설사 신청

사업비 550억 규모

내달 중순 선정예정

춘천시 신청사 신축공사에 35개 건설사가 참가 의사를 보였다.

오는 20일 예정된 현장설명회에 대표사로 춘천지역 2개사를 포함 도내 8개사, 외지 27개사 등 총 35개 건설사가 참가 신청을 했다.

관련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500억~1000억원인 3군 업체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고,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은 40% 이상이다.

대표사가 포함된 컨소시엄 건설사까지 포함하면 현장설명회에는 100여개 건설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소시엄에는 1,2군 중견 건설사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발주분은 건축을 비롯한 토목, 조경, 기계설비 분야로 사업비는 550억원이다.

건설사 선정은 조달청을 통해 6월 중순 선정되며, 공사는 6월말 시작된다.

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전기와 통신, 소방 분야는 추후 발주한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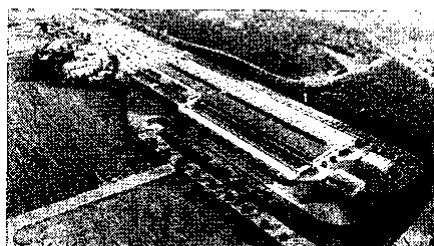
원주~강릉 철도 강릉차량기지 착공

건축물 공사는 8월 착수

원주~강릉 철도건설에 따른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가 본격화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가운데 강릉 차량기지에 대한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릉 차량기지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시설이다.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강릉 차량기지 조감도.

용지매수는 현재 78% 수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용지매수

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6월 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재 연약지반 처리 및 성토·절토 작업 등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중이며 여객차 검수고 등 열차검수를 위한 건축물 공사는 오는 8월쯤 착수할 예정이다.

노병국 본부장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86%의 공정률을 달성, 2017년 12월 노선을 차질 없이 개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릉/구정민 koo@kado.net